광주서 4년 만에 또… '솜방망이 처벌' 화 키웠다

매년 중·고교 재시험 100건 달해
'공정·신뢰' 내신성적 불신 커져
입시제도 성찰 등 근본대책 필요

4년 전 시험지가 통째로 유출돼 홍역을 치른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또다시 답안지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시험문제 유출' 학교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지난 시험지 유출 사건 때 교장과 교감 등 책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번 답안지 유출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교육당국도 중대안 사안을 즉시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쉬쉬'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는 내신 불신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조만간 시교육청의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대규모 징계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재시험은 매년 1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중학교 187건, 고등학교 481건의 재시험이 진행됐다.

지난 2020년에는 지역 일선 고등학교에서 문제 오류로 시행한 재시험이 무려 181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대학 진학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가운데 공정성과 신뢰성이 핵심이어야 할 내신에 대한 불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즉, 교육당국이 시험 평가와 관련해 유출 방지 등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미봉책에 그치며, 재시험 관행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답안지 유출 사건이 벌어진 대동고등학교에서는 4년 전인 지난 2018년에도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시험지가 통째로 유출된 전력이 있다.

시교육청은 당시 교장에게 중징계인 정직 1개월, 교감에게 감봉 2개월, 연구부장에게 견책 등의 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양형을 법인이 따르지 않아도 마땅한 제재가 없었다. 이에 법인 측은 교장과 교감, 연구부장 등에게 불문경고 등 시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양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4년 전 교감이 현재 교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교사 노조 관계자는 "4년 전 시험지 유출 사고 당시 유출에 가담한 행정실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났다"며 "당시 교장과 교감, 연구부장 등이 처벌을 단단히 받았다면 이번 일은 다시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기말고사 답안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조만간 특별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교육청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동고 학생의 교사 노트북 해킹 사건 관련, 학교 측의 문제가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기 위해 해당 실무부서와 협의하며 특별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감사팀은 시험문제 출제 과정부터 원본·답지 보관, 인쇄, 학생 배포까지 전반의 과정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생들이 교무실에 2차례 침입해 교사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있었는지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이 재시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으나 당시 처벌을 받은 교감(현 학교장)이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여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재시험 여부를 결정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는 교감, 교과군 대표 선생님, 외부인사(위촉)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 인해 성적지상주의에 빠진 학생들이 일탈을 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며 "정보통신의 발전 등 변화하는 상황에서 CCTV 설치가 아닌 입시제도에 대한 성찰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도심 열기 식혀라 연일 무더위가 이어진 26일 광주시 동구청 푸른도시과 관계자들이 살수차를 이용, 충장로 일대에 물을 뿌리며 도심 열기를 식히자 한 시민이 팔을 벌려 물을 맞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도교육청, 순천 사립학교 고발…승인 없이 학교이전 추진

순천의 한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학교 이전을 추진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4월 감사를 벌여 순천의 A 학교법인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A학교법인이 교육청의 승인이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학교 부지 이전을 추진한 점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은 또 일부 용역 계약을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해당 법인은 교육청 감사에서 "양해각서 체결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교육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환준 기자

광주·전남 배전노동자 이틀째 한전 점거농성

불법하도급 근절·임금인상 요구

광주·전남 지역 배전노동자들이 불법하도급 근절, 평균임금·하계휴가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전 점거농성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 전기지부는 25일 오후 4시부터 이틀째 광주 북구 오치동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1층 로비와 주차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에는 조합원 800여명이 참여해 300여명은 1층, 나머지 500여명은 주차장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한국전력이 중재에 나서 단체교섭이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 점거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원청인 한국전력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의 원인인 불법하도급을 묵인, 방치하고 있다"며 "배전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모르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8일부터 ▲한국전력 협력업체 불법하도급 척결 ▲전국평균임금 보장 ▲하계유급 휴가 3일 보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임채민 기자

시민사회, "자치구 경계조정 합의" 촉구

"인구·재정·복지 불균형"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권을 향해 자치구 간 경계조정 합의를 촉구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구간 경계조정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조정 근본 목적은 자치구 간 인구·재정·복지 불균형을 바로잡아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자치구 특색에 맞는 발전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자는 데 있다"며 "최근 잠정 논의 중단 결정은 그동안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됐던 구간 경계조정 논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중단 결정이) 총선을 앞둔 시기에 다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졸속으로 논의하려는 편법이 아니길 바란다. 실제 변화 없이 '자치구의 명칭 변경'만으로 왜곡된 경계조정이 합리화되는 일도 없길 바란다"며 우려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광주 발전과 시민편익 증대라는 대의에 입각해 논의를 뒤로 미루지말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임채민 기자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 (6M도로인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상무지구(상가매매)

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융4억가)

2) 월수익 350만
(보4천)

3) 평수140평, (전용100평)

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운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010-6670-9800 (062-382-5500)